

# 57년 만에 '모바일 민증' 시대... "분실 걱정 덜어"

(주민등록증)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5분 발급' 가능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대다수 '긍정' 반응

"이제 신분증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갑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14일부터 광주 등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발급을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주민센터. 입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민원인을 맞이했다.

발급 창구로 들어가자 담당 직원이 QR 코드를 통한 발급과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등 2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신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갖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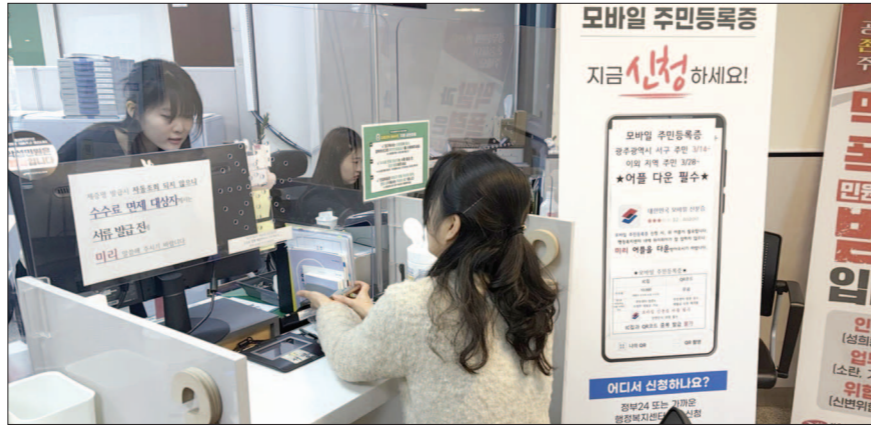
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은 IC칩 5000원,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5000원 등 총 1만원이다.

반면 QR코드를 통한 발급은 행정복지센터에 찾아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직원의 설명에 따라 휴대전화에 관련 앱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시간은 5분이 걸리지 않았다.

같은 날 상무2동복지센터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일부는 발급받지 못한 채 발길을 되돌리기도 했다.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있다.

일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비롯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이 너무 오래된 탓에 안면인식 오류가 발생해 발급에 난항을 겪었고, 실제 민원인의 절반 정도가 발급 과정에서 안면인식 오류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송이씨(65·여)는 "병원 등을 자주

가는데 한 번씩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이럴 일이 없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안 문제와 휴대전화 분실 시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발급을 주저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30대 윤지성씨는 "비슷한 얼굴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보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며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광주 등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했다.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1968년 주민등록증이 처음 생긴 이후 57년 만에 모바일 발급 시대가 열린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으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블록체인, 암호화 등 보안 기술도 적용됐고, 관공서, 병원, 투표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 등 모바일을 통한 각종 비대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 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한 뒤, 직접 스마트폰에 접속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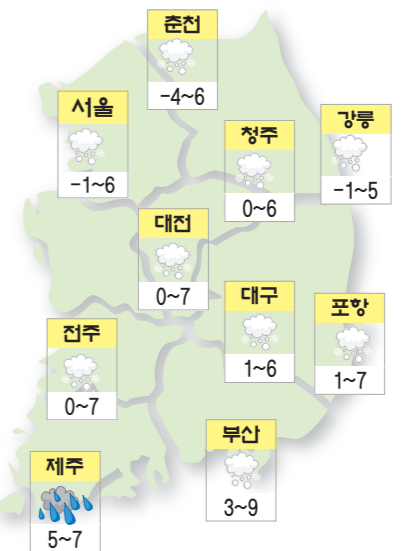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SOCIETY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 오늘의 날씨

예보 06:39 | 달출 22:31  
예보 18:42 | 달진 08:15



광주	☁️	1~6
목포	☁️	2~5
여수	☀️	2~8
순천	☁️	1~8
구례	☁️	-1~6
광주	☁️	0~6
임도	☀️	2~7
진남	☀️	2~6
고흥	☀️	1~8
진도	☀️	2~6

목포	밀물(고)	04:28 / 16:26
	썰물(저)	09:37 / 21:44
여수	밀물(고)	11:08 / 23:31
	썰물(저)	05:03 / 17:04

### 음주측정 거부한 현직 경찰관

만년필 ○·주말 새벽 시간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이끈.

17일 전남 나주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안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

A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 나주시 다시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이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감의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

## 김형수 복구의원, 갑질로 윤리특위 회부

### 직원 욕설 발단...자문위 의견 수렴 후 징계 결정

지난해 '막말' 논란으로 사과를 했던 김형수 광주 복구의원 의원이 이번엔 직원에 대한 갑질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17일 복구의원에 따르면 이날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형수 의원 징계 요구 건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곧바로 소집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징계안 심의·의결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가 소집·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자문을 한다. 위원은 시민단체 1명, 변호사 2명, 학계 2명, 퇴직공무원 1명, 회계사 1명 등 총 7명으로 꾸러진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수렴해 징계 양정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의원의 징계 요구 건은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갑질 피해신고

서가 접수됐고, 갑질피해신고센터는 조사 결과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리특별위원회로 이첩을 결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는 통상 2~3주 정도 안에 이뤄지지만, 새롭게 위원들이 꾸러진 터라 한 달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공공 복구의원 사무국장은 "윤리원칙대로 조사해 윤리특별위원회로 이첩을 결정했다"며 "조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수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직원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의장이었던 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이뤄진 민주주의 참배 행사에서 전남 모친상을 당한 직원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방문할 직원들에게 "오전에 참석하지 않아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김형수 의원과 당시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최무송, 정달성 의원이 직원들에게 사과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산하 기자 goback@



광주 진보연대는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尹 대통령 즉각 파면 해야...국민 건강권 훼손"

### 광주 시민·노동단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촉구 보건노조 "국립대병원 지원 축소...의료 공백 방치"

광주 진보연대, 보건노조 등 시민·노동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광주 진보연대는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졌으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50만명이 서울 광화문에 모였던 지난 3월 15일 집회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내란적 행태를 끝내고,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오미령 민주노총 광주본부 수석부부장, 김철영 광주진보노조·점성연합회 회장 등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엉기랴로 만들어 버린 것도 모자라 법과 원칙·소신대로 결정했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로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종사하는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5·18 민주영령 앞에 부끄럽

지 않은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고, 7공화국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광주·전남 보건노조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간호사·의사·약사 등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보건의료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공공의료 시스템 방치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병원 확충과 감염병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국립대병원 지원 축소·방역 예산 삭감 등으로 국민의 의료 공백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 '尹 탄핵 촉구' 시위 중 쓰러진 60대 사망

광주 도심의 한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60대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17일 광주 북부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8시13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무등산국립공원, 단독 등반 비율 '전국 최고'

### 도시 근교·사계절 생태경관·사진 명소 등 '매력' 살려 재충전·친목 도모... "등산, 2030 취미로 부상"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인 무등산국립공원을 단독으로 등반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립공원공단이 발간한 2025 국립공원 탐방 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단독 산행(혼산)을 즐기는 공인과 탐방 비율에서도 전국 2위(14.0%)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11~17일 전국 19세

이상 69세 이하 3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해 태백산(13.9%), 북한산(12.5%), 가야산(11.9%), 계룡산(11.3%) 순으로 나타났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친구·연인·동료·지인과의 탐방 비율에서도 전국 2위(46.7%)를 기록했다.

1위는 월악산(48.4%)이었으며, 3위

북한산(41.3%), 4위 한라산(40.6%), 5위 다도해해상(37.1%)이었다.

이처럼 무등산국립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유는 사계절 생태 경관이 뚜렷하고 서석대·임석대 등 사진 찍을 명소가 넘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탐방 목적은 도시 근교에 있어 주로 삶의 재충전과 친목 도모, 유대감 형성 등이라고 답했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 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프로그램(다중응답)은 치유·힐링 프로그램 48.5%, 자연·생태계 체험과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인 무등산국립공원을 단독으로 등반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무등산을 오르는 시민들.

지역 문화 체험이 각각 34.8%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에 도입·확충됐으면 하는 시설(다중응답)로는 저지대 탐방로(둘레길, 산책로 등)가 45.5%로 가장 높았다.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실, 쉼터 등)

36.6%, 탐방안내시설 27.2%, 체험전시 시설(박물관, 체험학습관 등) 22.3% 등의 순이었다.

943명의 탐방 매니아에 대한 세분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탐방 매니아들은 국립공원 방문 시 산

책·트레킹(65.2%)을 가장 많이 참여했다.

이어 자연경관·전망 감상(64.9%), 휴식·휴양(57.8%), 정상 등반·고지대 탐방(50.6%)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이들은 저지대 탐방로(41.8%), 편의시설(33.1%), 탐방안내시설(31.5%) 순으로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국립공원 탐방 시 희망하는 여행 테마로는 '온 가족이 참여하는 트레킹 여행'이 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5060세대 취미활동의 전유물이었던 등산이 2030세대의 취미활동으로 급부상하면서 힘든 산행보다 안전하게 트레킹하기 좋은 탐방코스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